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시하는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등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이 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5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시장정책관(이하 제27조에서 “자본시장정책관”이라 한다)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
  4.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는 규칙 제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사, 관계회사, 회계법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시

장과장(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공정시장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이하 이 항에서 “의사록”이라 한다)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공정시장과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위원의 성명 및 그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 ⑩ 공정시장과장은 차기 회의에서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규칙 제4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과 회의록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분담금 수입 예산을 말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4등분한 금액을 그 분기가 시작된 달의 말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입 예산과 징수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영 제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라.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회사의 대표자의 의견이 제시될 것

마. 영 제9조제8항제2호의 보고내용에 영 제9조제9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시정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다. 회사의 대표자는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2. 영 제9조제13항제1호 및 제2호
3.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③ 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의 현황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재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④ 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영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⑥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항에서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 이전 1년간의 실적에 따라 판단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지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신청인에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조사 시 요구할 자료

⑧ 실지조사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⑨ 영 제11조제3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있는 흠결(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그 흠결을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
2. 금융감독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제3항제3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데 걸리는 기간
3.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가 지정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송(법, 「공인회계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송에 한정한다)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등(이하 “감리업무등”이라 한다)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신청인의 등록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이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한다)이 영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인원수(數)보다 해당 규정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가 많은

경우에 감사는 주식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한다.

③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가 7명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사는 주주 및 채권자 중에서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또는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득이하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감사는 그 이유를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2. 그 밖의 회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회계법인에 요구하는 경우

2.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3. 회사가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5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같은 업종[제조업인 경우에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다]의 평균”은 12월에 결산을 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같은 업종(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업종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평균 부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채비율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업종 내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 및 가장 낮은 회사. 이 경우, 부채비율이 음수인 회사는 제외한다

2. 자기자본이 영(零)이거나 음수인 회사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을 적용한다.

⑦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과거 3년간”이란, 금융감독원장이 회사가 감사인 지정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⑧ 지정대상 선정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발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활동을 수행하였을 것

2.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였을 것

3. 피신청인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였을 것

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한 경우. 다만, 회사가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거부한 이유가 합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문서로 제안하였을 것.

4.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임을 피신청인에 약속하였을 것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 및 신청인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개황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3. 감사인 지정 요청 이유

③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주채권은행의 감사인 지정 요청 대상인 회사 또는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 지정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주채권은행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감사인 지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

2. 감사인 지정이 피신청인등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

3. 제3항제3호가 신청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것

⑤ 신청인 또는 주채권은행의 감사인 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제6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3.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시행되는 날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의 수가 해당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의 시행일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

까지의 연간 평균치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해당 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회사 중 일부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③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빠른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처분”이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말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2. 영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적지표의 점수(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이하 “감사인지정 점수”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차감할 것
3. 영 제15조제4항제4호: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회계법인에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인이 그 회사가 해당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이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⑨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⑩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는 날(이하 “지정기준일”)은 별표 2와 같다.

⑪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란 지정 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⑫ 금융감독원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조치결과를 매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 또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3. 회사가 별표 4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에 속한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를 감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회사집단 내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회사들이 감사

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④ 영 제16조제7항제3호에 따라 회사는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에 그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업무수행기관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준일 이내에 관련 회사, 감사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지)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말한다.

제17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감사인은 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

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하 “중요성 금액”이라 한다) 및 그 판단근거를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첨부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와 함께 논의한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엄수의 예외)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감리업무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된 정보가 협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제공된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될 것

제19조(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 외의 회사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외에 해당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20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계법인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보수
3.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세부현황
4. 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비중
5. 심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은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감리업무등의 착수) ①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감리업무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29조제1호에 따른 업무(이하 “재무제표 심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업무(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령등을 위반한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감리업무등에 따른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업무수행기관이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에 위반내용을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피조사자가 감리업무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당 회사가 감리업무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리업무수행기관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법령등 위반에 관한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 위반 혐의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는 경우

② 감리업무수행기관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리업무수행기관이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계획한 경우

가. 감사인으로서 감사를 한 주권상장법인의 수가 많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에 대한 감리 필요성이 높은 감사인을 선별

나. 사업보고서 및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을 선별

다.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은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2. 감리업무등을 수행한 결과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외국의 회계감독기관이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그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각각 검토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는 경우

③ 감리업무수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29조제1호에 따른 심사(이하 “재무제표 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리업무수행기관이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계획한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업종, 회사 및 계정 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별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2.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 대상인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법행위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3.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심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에 한정하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기관이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제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제외한다.
- ⑤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등을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22조(감리업무등의 방법) ① 감리업무수행기관은 감리업무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업무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 제출 및 관계자 의견진술 · 보고

2. 장부 · 서류 열람 및 업무 · 재산상태의 조사

②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요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업무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구기간을 생략하거나 피조사자에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감리업무등의 대상이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업무수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업무수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 · 은닉 ·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업무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업무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써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④ 감리업무수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리업무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⑤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진술서(이하 이 조에서 “진술서”라 한다),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업무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업무수행기관이 정한다.

제2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진술서, 자신이 감리업무수

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자신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리업무수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감리업무수행기관이 제29조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하 “고발”이라 한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진술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 임원 및 관계자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4. 3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5. 경고
6.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로서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

2.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해당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3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해당 감사보고서 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제28조에서 “감리”라 한다)를 한 결과 법 제39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및 고발(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피조사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업무수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제26조(감리업무수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피조사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수정공시를 권고하거나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감리업무수행기관은 감리결과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감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감리위원회의 설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 결과 조치등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3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3.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업무등 관련 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본시장정책관
2. 영 제45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3. 규칙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5.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 상장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
  7.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명
  8.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⑤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는 규칙 제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감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 및 감리업무수행기관의 안건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안건 관련 업무를 법 및 영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안전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전을 설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이하 이 항에서 “의사록”이라 한다)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공정시장과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전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위원의 성명 및 그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공정시장과장은 차기 회의에서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⑫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전통지) ① 감리업무수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

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업무수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고의로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근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고발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0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업무수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업무수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업무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업무수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① 법 별표 2 제5호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② 법 별표 2 제5호 후단에서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사후관리)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2. 임원해임 권고: 임원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3.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4. 감사업무 참여 제한: 조치기간 종료 후 1개월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한 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업무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35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등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26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36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업무등에 따른 조치등(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게시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게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및 근거

② 증선위는 감리업무등의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  
련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거래소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종합금  
융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금융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제37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제25조 및 제26제1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인지정 관련 경과조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9조의 2제1항이 최초로 시행되기 전에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실적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로서 주사무소(主事務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질 것

가) 대표이사: 10년 이상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2)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3) 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였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

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입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인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따른 감리업무수행기관의 개선권고 사항 관리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공인회계사 수	40명 ~ 70명	71명 ~ 100명	101명 ~ 300명	301명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추는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다.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보다 많은 경력기간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해당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회사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회사에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심리결과(심리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및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를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평균 연봉보다 높은 수준

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별표 2]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제12조제8항 및 제14조제11항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준일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	회사 및 관계기관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법 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4호 및 제8호	금융감독원이 지정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 경우

가.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한다.

나.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6항제2호 관련)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감사인지정 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9월 1일(이하 이 별표 및 별표4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산정기준일에 주사무소(主事務所)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주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1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3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각각에 대하여 3%를 가산한다.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5년 이상	경력기간 3년 이상	경력기간 1년 이상	경력기간 1년 미만
130	120	110	100	90	80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 점수 중 일부를 차감한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5%	10%	15%	20%	25%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산정기준일부터 다음 해 산정기준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천억원 이상부터 5조원 미만까지	4천억원 미만
가중치	3배	2배	1배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9항 관련)

1. 법 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5개 군(郡)으로 구분한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경우
마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2.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5개 군으로 구분한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주사무소에 소속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	손해배상 능력	전년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3. 회사의 감사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만,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지정하는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만,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계법인 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만,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의 집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계법인 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바.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마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만,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계법인 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가.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그 지정제외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3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한다.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가중시 최대	I	II	III	IV	V	감경시 최소
고의	300	250	200	150	100	60	4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40	30	20	10	-	-	-

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 3)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정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라.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마.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실적
-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그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바.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

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 2) 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 3)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 4) 영업기간이 긴 회계법인

[별표 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조직 · 인력 · 예산

가.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나.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현황

다. 사업부문별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현황

마. 임직원 성과평가지표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지표의 비중

바. 전체 예산 중 품질관리업무 관련 예산의 비중

2. 운영체계

가. 외감대상 회사중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

나. 수습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

다. 심리(외국제휴법인이 수행한 심리를 포함한다) 및 관련 문서보관 체계 현황

[별표 6] 수시 보고 사항(제20조제3항 관련)

1. 회계감사 등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에 관한 사항(사유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다)

나. 독립성 위반에 관한 사항

다.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감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회계법인의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상호변경

나. 정관변경(단, 사원 및 이사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선임과 해임

라. 고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사. 외국법인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아.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항(특수관계자 추가 및 해제 등)

3.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금융위원회 또는 외국감독기구 등으로부터의 인가·인가취소나 행정조치 등을 받는 경우

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다. 자기자본 10% 이상(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 라.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 마.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경영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 소속 이사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사. 주요 출자사원(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아. 이사 등 임직원이 횡령, 위조,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감사, 증권, 세무, 은행, 소비자보호, 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錢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임직원의 신고 등을 통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한 경우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신규상장 또는 상장폐지 등과 관련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해당 계정의 중요성 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규모
- 3)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계정의 중요도
-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 가. 가중사유

- 1)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 2)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5개 사업연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 3) 조치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2개 사업연도 이내에 조치를 받거나,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 이상인 경우
-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 5)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인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2) 회사가 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문서(이하 “감리문서”라 한다)를 최초로 받기 전에 스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3) 회사가 감리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감리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스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업무수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업무수행기관이 발송한 감리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받은 감리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4)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이 지적되지 않은 경우.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결과에서도 취약사항이 지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5)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경우

- 6)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9) 내부자 고발에 따른 조치인 경우 그 내부자
- 10) 그 밖에 위반자의 경영여건, 부담능력 등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업무수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1.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2 이상 ~ 2.6 미만	15%	350%
1.8 이상 ~ 2.2 미만	10%	250%
1.4 이상 ~ 1.8 미만	5%	15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항목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가중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li> <li>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li> <li>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li> <li>회계장부, 전표(錢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li> <li>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li> </ul>

중요도		항목	가중치	상(上, 3점)	중(中, 2점)
				<p>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p> <p>·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관한 약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p>	<p>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p> <p>· 임직원의 신고 등을 통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한 경우</p> <p>·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p>
	감사인	0.4	<p>·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p>	<p>·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p> <p>·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p>	
위법행위 정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	중요성 금액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상장법인 제외)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2.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나) 지정감사인인 경우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3)부터 5)까지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별표 7의 제3호나목6)부터 10)까지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3.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제2항 관련)

##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에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영 제43조제2항에서 위법행위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법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



법 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2.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나.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미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다. 위반동기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다목3)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가중사유

-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사유

- 1)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법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법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과태료 부과 면제

가.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  
미 받은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법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회사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해당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해당 회사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  
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가.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	보통	경미
-*	-*	<p>“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조치대상이 사업보고서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인 경우</p> <p>2) 법규를 위반한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p>

\* 중대, 보통은 3. 예정금액의 산정 중 해당내용과 같다.

나. 위의 제3호다목5)에서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조치대상 회계연도에 위반회사의 임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등 회사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조치대상 회계연도에 위반회사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회사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